

[ 현안진단 32호]

[특별기고] 민단과 총련, 이제는 화합으로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I. 재일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 II. 재일동포 사회의 형성과 분단
- III. 민단과 총련 그리고 재일동포의 삶
- IV. 민단과 총련의 만남과 화해
- V. 맺으며

I. 재일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올 초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서 새롭게 선출된 하병옥 단장이 지난 5월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본부를 전격 방문하였다. 사실상 해방 후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 5월 17일 오전, 총련 중앙본부가 있는 도쿄의 치요다(千代田)구 후지미(富士見)초에는 총련 결성 이후 가장 많은 150여명의 취재진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총련의 서만술 의장과 민단 하병옥 단장은 총련본부 회의실에서 약 40분간 회담을 갖고 역사적인 ‘5.17 공동성명문’에 서명 합의하였다.

아마도 재일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이들 두 단체의 화해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빈번하게 만나고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만남의 배경에는 하나의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일체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또한 2000년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단-총련의 관계와 남북관계가 일치할 것이라는 선협적 판단은 현실과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

우리 사회는 재일동포 사회에 대해 그다지 관심도 없지만, 이와는 달리 이들에 대해 막연하나마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비슷한 700만 재외동포 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사실 중국을 비롯해서 백두산 여행을 가 보아도 쉽사리 조선족 동포 안내자들을 만나며, 러시아, 미국, 유럽, 동남아 어디를 가더라도 교민 또는 동포들이 우리를 안내해 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적당히’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왔던 것은 아닌가 싶다.

재외동포들의 삶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고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사실상 아는 게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재일동포의 경우 대다수가 조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재외국민(단기체류자를 제외한)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어느 국가의 재외동포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더라도 그들이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조국의 동포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원인이 있다. 더욱이 이념적 분단과 일제 지배사의 고통, 그리고 차별이 존재하는 재일동포 사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II. 재일동포 사회의 형성과 분단

재일동포 사회의 형성은 일제의 징용과 징병, 조선시대 도공의 강제이주 그리고 백제의 멸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통상 일제의 결과에 의해 해방 이후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합방 이전 800명에 불과하던 조선인들이 1945년 해방직전에는 무려 240만에 이르렀다. 해방이 되고 귀국사업이 전개되면서 60만 명이 남게 되었는데,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을 재일동포라 할 수 있다. 물론 45년 이후 해방정국에서 국내의 이념분쟁과 민중봉기 등으로 인해 일본행을 선택한 이들도 있으며, 또한 60-70년대 경제고난을 탈출하기 위해 밀항을 시도한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돈벌이’를 위해 일본행을 택하는 신세대 재일동포 '뉴커머'(new comer)들도 있다. 이 밖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들도 우리의 동포들이다.

2001년 외교통상부 통계로는 재일동포 수치는 ‘귀화자’를 제외하여 약 64만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2003년부터 그 통계 방식을 달리해서 ‘귀화자’를 포함하여 90만 명(2005년, 90만1천명)에 이른다. 이 밖에 불법체류자 및 입양, 국제결혼 등을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오늘날 우리들은 재일동포들을 편의상 민단과 총련동포로 구분하지만, 한국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민단동포라고 볼 수는 없으며(민단이 관리하는 대상일 수는 있다) 또한

‘조선적’ (북한과 일본이 미수교국이므로)을 가진 사람들을 총련동포라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수년전 필자 역시 몇 안 되는 한국측 학교(4개교) 출신 재일동포 통일운동가들과의 대화 중 ‘민단계 학교’ ‘민단계 동포’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책망을 들은 바가 있다. 요컨대 재일동포는 한국국적, 조선적 동포 65만, 귀화자 25만으로 총 90여만 명이며, 이 외에 다른 이유의 체류자들이 존재한다.

해방 직후에는 모두 국적이 없이 ‘조선’ 으로 표기되는 60만동포가 있었으며, 48년 남북 분단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점차 한국적, 조선적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65년 한일수교 이후 한국적은 한국국적이 된 것이다. 또한 귀화자들은 연 5천여 명 규모에서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연 1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단과 총련은 본시 재일조선인연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총련의 전신은 재일조선인연맹(45.10, 이하 조련),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51.1, 이하 민전)이며, 55년 민전 6차대회에서 해산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조직인 총련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민단의 전신은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45. 11, 이하 건청)이라 할 수 있는데, 이후 재일본조선거류민단(46.4, 이하 조선민단),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48.9, 이하 거류민단), 그리고 1994년에 오늘의 명칭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개칭된 것이다. 다만 해방 후부터 남북 분단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45-48) 조련과 조선민단은 대립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다. 47년 조선민단 단장 박열은 민단신문(47.3.21)을 통해 조련에 대해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조련이 동포를 위해 이바지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해방 직후 조련은 재일동포 대다수를 아우르는 동포들의 대중조직인 반면, 민단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양측의 관계는 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다. 한국정부 수립 이후 조선민단의 의장단은 민단을 떠나고,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재편되면서 ‘거류민단’ 으로 개칭·개편되었다. 모국의 분단 정부수립과 때를 같이하여 조련과 거류민단의 분단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조련은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라 일본공산당 ‘민족대책부’ 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민전 시기에 이르러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사회주의정당인 조선로동당(북한)을 지지할 것인지, 계속해서 일본공산당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55년 민전 6차대회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한덕수 세력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민전해산과 동시에 총련이 결성되었다. 이로써 55년에 이르러 재일동포 조직은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과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으로 재구성되었고, 소위 ‘보이지 않는 분단’ 이 재일동포 사회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다만 55년까지만 하더라도 총련의 위세는 대단하였다. 굳이 국적구분으로 나누어볼 때 일본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조선적이 43만(75%)이며, 한국적이 14만(25%)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다. 더욱이

거의 모든 민족학교가 총련 산하에 편재되어 있었다.

Ⅲ. 민단과 총련 그리고 재일동포의 삶

교육열이 높은 재일동포 사회에서 대다수의 민족학교가 총련 산하에 있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그런데 국내의 식자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남북의 경제력을 비교할 때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찌하여 일본의 재일동포들의 학교는 이와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최근 총련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민족학교는 77개의 울타리(校舍)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사 내에 초중고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헤아리면 131개 학교가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학교는 4개의 울타리에 모두 11개 학교에 불과하다.(유치원 제외) 물론 재일동포들 자녀들의 85%가 넘는 학생들은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련계 학교들은 동포들이 다니고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측 학교들은 몇 개 되지 않아서 3대 도시(도쿄, 오사카, 교토)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닐 수도 없다. 이러한 결과가 파생된 원인은 해방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모든 민족학교들은 총련의 전신인 조련 산하에 있었고, 민단은 왜소한 조직에 불과하여 학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북한은 57년부터 막대한 액수의 ‘교육원조금 및 장학금’을 재일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지원한 반면, 한국정부의 지원은 70년대 이르러서야 민단 조직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북한은 연 2억엔 가량의 지원금을 보내고 있어 그 규모가 적으며 이 역시 북한이 직접 보내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 있지만, 60-80년대까지의 막대한 규모의 지원은 재일동포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75년의 경우 연 37억엔을 지원했는데, 이 액수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당시 환율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액수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지원은 교육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재일동포들의 경제와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9년 재일본조선인상공인연합회(이하 상공회)가, 61년 재일본조선인신용조합협회(우리의 은행, 이하 조신협)가 총련에 가입하게 되었다. 총련의 대부분의 산하단체들이 해방직후 조련시기부터 구성된 것과 비교할 때 이 두 조직의 총련 가입은 그 의미가 다르다. 두 단체의 총련 가입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지원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60년을 전후해서 연 5억엔 가량의 지원금이 총련으로 왔을 때 이를 맡겨야 할 은행이 필요했고, 또한 은행을 이를 자본으로 재일동포 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일본에서 상공인들이 일본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북한의 교육원조금 및 장학금은 교육 영역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삶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지원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였고, 따라서 총련의 경제난이 파생되면서 조신협은 해산되었고, 총련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유인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북한의 지원에 대한 재일동포들 1, 2세들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결과만이 아니라 민족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 총련의 주요사업 중 하나는 민족교육의 중흥에 있다.

이는 총련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족 정체성이 점차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가지 위한 동포들의 고민은 민단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민족문제에 대한 고민은 민단과 총련 모두가 해왔겠으나 공동으로 노력하기에는 이념적 벽이 너무 컸다. 코리아타운의 사례를 보면 이웃집 간에도 인사조차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 간에도 민단과 총련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를테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과 ‘제삿날’ 은 ‘다투는 날’ 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현재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는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과거에 총련계 민족학교를 졸업하고, 총련의 중견 간부로 활동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한국국적이면서도 총련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총련계 민족학교 학생에 30%에 이른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일제 36년의 역사의 산물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두 가지 명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단-총련의 관계 개선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다.

IV. 민단과 총련의 만남과 화해

지난 5월 하병욱 단장의 최초의 총련 중앙본부 방문을 바라보는 재일동포 1, 2세들의 감동은 남달랐을 것이라 생각된다. ‘보이지 않는 분단’ 속에서 뒤섞여 살며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기에 민단과 총련은 본국 정부로부터 철저한 이념적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이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보이지 않는 3.8선이 가

로 농인 재일동포 사회에 화합의 무드를 가져다주었다. 2000년 이후 지역의 민단과 총련의 공동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민단-총련동포들 간에 서먹한 감정이 많이 사라져갔다. 특히 2001년과 2003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민단-총련동포 한마당 축제인 ‘하나마토리’는 수만 명의 동포와 함께 일본인들이 공생과 공존을 위해 하나되는 의미있는 행사로서 대규모 통일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민간에서는 1985년 시작된 ‘원코리아페스티벌’이 20년이 넘게 매년 개최되어 국적(민단-총련) 구분 없이 동포사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효고현, 교토, 가와사키 등 여러 지역의 동포들이 화합을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아왔다.

이러한 배경에서도 나름의 한계는 분명했다. 재일동포 시민단체와 민단-총련 하부와는 달리 민단과 총련의 중앙조직(도쿄)은 한반도의 탈냉전 기류와 동포 대중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조직의 동포 1세대들은 기존의 관성을 순식간에 중단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총련 의장단의 서만술 의장을 비롯해 실질적인 권력자로 알려지고 있는 허종만 부의장 등은 이미 총련의 결성과 역사를 같이해 온 인물들이다. 또한 민단 중앙조직의 1세 간부들 역시 과거 냉전기에 민단을 지켜온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이들에게 통일과 화합을 위한 변화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관성이 일순간 사라지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물며 총련 의장단을 비롯한 1세대의 경우 북측의 지시(변화에 대한)마저도 안따르는데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001년 사망했지만 총련을 반세기동안 지도해 온 한덕수 의장과 현재의 허종만 부의장은 김일성 시대 총련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이 세대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는지 아니면 북측의 구세대(수구세력)와 여전히 밀착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의문이다.

아무튼 이번 회담의 중요한 배경에는 남북한의 화해무드를 빼놓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민단 중앙의 내부쇄신과 강력한 개혁방침이 실천력을 더하면서 실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새롭게 구성된 민단의 주요 임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려웠다. 2월 24일 민단 제49회 정기중앙대회에서 하병욱 단장과 김광승 의장, 김창식 감찰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으나, 3월 후속인사에서 중앙본부의 국장(6국)이 전원 유임되어 민단 내부의 변화가 과연 있을까라고 평가되었다. 또한 새로운 집행부는 ‘개혁민단 10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동포들의 교육과 복지문제를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며 아울러 동포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실천력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필자는 김창식 감찰위원장(전 오사카민단 단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바로 민단 중앙의 지원 없이 ‘하나마토리’를 오사카 총련과 함께 만들어 내었던 중심인물로서 그는 민족의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사고와 실천력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4월말 신임 집행부의 청와대 방문 이후 총련과의 접근이 보다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민단 집행부의 총련과의 화합을 위한 노력을 참여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남과 회담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일이다. 민단 단장의 방문을 순순히 맞아한 총련의 입장 역시 여러 분석을 낳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재일동포 사회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남북 정부당국이 이들의 화합을 ‘허용’ 해주어야 한다. 둘째 민단과 총련 중앙본부의 지도자들이 화합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포대중들의 화합 의지가 필요하다. 2000년 이후 그동안 남측 정부만이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왔고, 동포 대중들의 화합의지는 대단히 강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북측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하였고, 민단-총련 중앙조직 역시 구시대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게 아닌가 하고 평가되었다.

이번 만남은 북측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만남을 ‘승인’ 했다고는 볼 수 있다. 즉 김정일 위원장의 ‘수표’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총련의 현 집행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방침을 정확히 수행할 지는 의문이지만, 최소한 방침을 거슬러 갈 수는 없으며, 어차피 민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상 더 이상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민단-총련 중앙만의 의미가 아니라 각 지방의 말단 하부조직들의 민단-총련 공동행사에 대한 제약요인이 상당부분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이 두 기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남측과 총련의 관계 및 교류협력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에도 총련 또는 조선(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적지 않게 남한을 방문하고 있고, 하물며 부산 프로축구 구단에서는 조선적 동포이자 북한의 국가대표 안영학을 영입하여 ‘베스트11’ 으로 기용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 간의 교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V. 맺으며

이제 6.15와 8.15행사에 민단과 총련이 나란히 참석하는 모습을 쉽지 않게 접하게 되었다. 물론 일부 지방본부의 경우 역으로 반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만남의 의미가 더 큰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단과 총련 중앙조직 모두 진정으로 동포들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민단의 개혁 노선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동포들의 복지와 교육(문화적 정체성)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동포사회에만 내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양측 정부당국은 재외동포 중 유일하게 한국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재외국민인 재일동포들을 위해 그리고 이념적 피해뿐만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함께 품고 살아온 재일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시대’를 얘기하며 또한 ‘민족공동체통일’을 주장해왔다. 글로벌 시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재외동포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재일동포 청년들의 여론조사 실시해 보면 조국의 동포들이 자기들의 삶을 ‘조금만’ 공부해주시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어느 교과서에도 재외동포들에 대한 내용은 한 줄 나오지 않는다.

또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의 민족공동체는 남북한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 통일은 남북한의 지리적 통합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적·정서적 공동체로 거듭나는 노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분단의 삶을 살아온 재일동포들의 삶과 애환에 대한 이해는 글로벌 시대를 위해 그리고 민족공동체를 위해 절실한 문제이다.

2006/06/15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